



# 서정민 사회

## 2018년 6.23 서울시(9급) 시험

### [사회] (A)형 문제/해설

꿈의 크기가 자신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서정민 공무원 고시 연구소 [www.cafe.naver.com/uriminlab](http://www.cafe.naver.com/uriminlab)

#### <총평>

##### 1. 과목별 출제 문항 비율

- 법과정치 7문제, 사회문화 7문제, 경제 6문제가 출제되었다.

문항 번호	출제 내용			
	과목	단원	출제부분	난이도
1	법정	2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하
2	법정	3	사회권과 청구권의 특징	하
3	사문	1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하
4	법정	2	정당, 시민단체, 이익집단의 비교	하
5	법정	3	헌법재판소의 권한	하
6	사문	2	관료제와 탈관료제	하
7	사문	4	사회 불평등 현상을 보는 기 능론과 갈등론	하
8	사문	6	인구변천	중
9	사문	4	계층 구조	하
10	경제	4	긴축정책의 수단	하
11	경제	1	국민경제 순환 모형	하
12	사문	2	일탈이론	하
13	법정	2	소선거구와 중선거구(광역과 기초 지방의회 선거)	중
14	경제	1	비교우위	중
15	경제	4	실질GDP와 명목GDP	중
16	법정	5	연소자의 근로	중
17	법정	6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	하
18	경제	4	고용률, 실업률	중
19	사문	2	지위와 역할	하
20	경제	2	수요의 변동	하

##### 2. 난이도와 경향

2017년에는 경제가 8문제 출제되었는데, 금년도에는 6문제로 줄어들었고, 난이도도 낮았다. 법과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두 전반적으로 작년보다 난이도가 낮은 문제였고, 너무 평범한 문제여서 수험생들은 거의 만점을 받았을 것이다.

##### (1) 법과정치

선거구 문제, 연소 근로자의 근로 시간 등을 제외하면 틀릴 수 없는 문제만 출제된 것 같다. 아주 평범한 문제였다.

##### (2) 사회문화

인구변천이 과거 사회복지직에서 한 번 출제되었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다시 출제된 것이 특징이다. 나머지 문제들은 너무 평이해서 바로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다.

##### (3) 경제

마지막 수요의 변동 문제에서,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출제 오류가 있었다. 고용률과 실업률 문제, 비교우위 문제 외에는 크게 어려운 문항이 없었다.

문 1. <보기>의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가), (나)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의원내각제 중 하나인 정부 형태이다.)  
<보기>

모든 국가에는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정부 형태에 따라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에게 상징적인 권위만을 부여하기도 하고, 실질적인 통치권을 함께 부여하기도 한다. 현대 정부 형태에서 전형적인 정부 형태인 (가)는 이 두 가지가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나)는 그렇지 않다.

- ① (가)는 로크의 2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 ② (가)에서 행정부 수반의 임기는 예외적이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엄격하게 보장된다.
- ③ (나)에서 행정부 수반은 의회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
- ④ 영국과 일본은 (가), 대한민국과 미국은 (나)를 채택하고 있다.

문 2. <보기 1>의 (가), (나)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 1>

기본권	관련 헌법 조항
(가)	제33조 ① 근로자는 근로 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 교섭권 및 단체 행동권을 가진다.
(나)	제30조 타인의 범죄 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보기 2>

- ㄱ. (가)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권이다.
- ㄴ. (나)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이다.
- ㄷ. (나)는 (가)와 달리 수단적이고 절차적 권리라는 성격을 가진다.
- ㄹ. (가), (나) 모두 근대 시민 혁명 직후 확립된 권리이다.

- ① ㄱ, ㄴ      ② ㄷ, ㄹ      ③ ㄱ, ㄴ, ㄷ      ④ ㄴ, ㄷ, ㄹ

[문1 해설] 정답② 법과정치 「정부형태」 난이도 하

(가)는 대통령제, (나)는 의원내각제 정부형태이다.

- ① (×) 로크의 2권 분립을 바탕으로 하는 정부형태는 의원내각제이다. 대통령제는 몽테스키외의 3권 분립을 바탕으로 한다.
- ② (○) 대통령제에서 행정부 수반은 대통령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하기 때문에 임기가 보장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통령의 직무상 행위가 위법하거나 위헌적일 경우에는 탄핵심판을 받아 임기가 보장되지 않을 수도 있다.
- ③ (×) 의원내각제에서의 행정부 수반은 수상이다. 의회가 불신임을 의결하면 수상을 비롯한 모든 각료들은 총 사퇴를 해야 한다. 따라서 수상은 의회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부담한다.
- ④ (×) 영국과 일본은 의원내각제를, 대한민국과 미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다만, 대한민국은 대통령제를 근간으로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다소 가미하고 있다.

[문2 해설] 정답③ 법과정치 「기본권」 난이도 하

(가)는 근로3권이고, (나)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이다. 따라서 (가)는 사회권이고, (나)는 청구권이다.

- ㄱ. (○) 사회권은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권리이다.
- ㄴ. (○) 청구권은 다른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수단적 권리이다.
- ㄷ. (○) 수단적이고 절차적 권리는 청구권이다.
- ㄹ. (×) 청구권은 근대에서도 있었지만, 사회권은 현대에서 등장한 권리이다. 사회권은 효시는 1919년 독일의 바이마르공화국 헌법이다.

문3. <보기>의 (가), (나) 연구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구분	연구 목적	한계
(가)	청소년의 지속적인 봉사활동이 청소년의 인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가지고 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봉사 활동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자 함.	㉠
(나)	현대 사회는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여가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음. 이에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봉사 활동이 갖는 의미를 연구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연구자의 주관적 가치개입 가능성 있음

- ① (가)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 (나)는 방법론적 일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 ② (가)는 연구 대상자의 내면 세계 중시, (나)는 변인 간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한다.
- ③ ‘객관적인 관찰이 불가능하다’는 ㉠에 들어갈 수 있다.
- ④ (나)에서는 비공식적 자료가 중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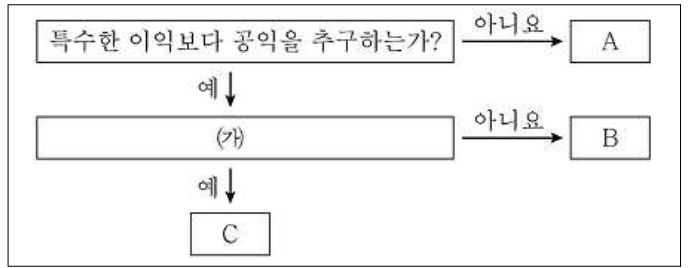
[문3 해설] 정답④ 사회문화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난이도 하

(가)는 양적 연구, (나)는 질적 연구이다.

- ① (×) 양적 연구는 방법론적 일원론이고, 질적 연구는 방법론적 이원론의 입장을 취한다.
- ② (×) 양적 연구는 변인 간의 법칙 발견을 목적으로 하고,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내면 세계를 중시한다.
- ③ (×) 양적 연구는 객관적인 관찰이 가능하다.
- ④ (○) 질적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심층적인 의미를 이해하려는 연구 방법이기 때문에, 일기장이나 메모장 같은 비공식적 자료를 중시한다.

문4. <보기>는 전형적인 정치 참여 집단을 구분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A~C는 각각 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중 하나이다.)

<보기>



- ① A는 시민 단체이다.
- ② (가)에는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있다.
- ③ (가)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C는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④ B, C와 달리 A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이다.

[문4 해설] 정답③ 법과정치 「참여집단」 난이도 하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은 이익집단이다.

- ① (×) A는 특수한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이익집단이다. 시민단체와 정당은 공익을 추구한다.
- ② (×) C는 정당이나 시민단체가 들어가야 하는데, 노동조합은 이익 집단이다. 따라서 (가)에 ‘대표적인 사례로 노동조합을 들 수 있는가?’가 들어갈 수 없다.
- ③ (○) (가)에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지는가?’가 들어가면, C는 정당이 들어가야 한다. 여기서 정치적 책임은 선거에서 국민들의 심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정당은 정부와 의회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 ④ (×)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된 집단은 이익집단과 시민단체이다. 정당은 아무나 창당할 수 있지만, 정당법에 규정된 요건을 구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만 설립되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문5. <보기 1>의 헌법재판소의 권한 ㉠~㉣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1>

구분	청구 요건
(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을 때
(나)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때
(다)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보기2>

- ㉠. (가)는 헌법소원심판, (나)는 위헌법률심판, (다)는 정당해산심판이다.
- ㉡. (나)의 제청 주체는 해당 법률을 재판에 적용할지 판단하는 법원이다.
- ㉢. (다)의 심판결과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 (다)는 국회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제소한다.

- ① ㉠,㉡
- ② ㉠,㉢
- ③ ㉠,㉡,㉢
- ④ ㉡,㉢,㉣

[문5 해설] 정답① 법과정치 「헌법재판」 난이도 하

- ㉠. (○) (가)는 헌법소원심판, (나)는 위헌법률심판, (다)는 정당해산심판이다.
- ㉡. (○) 위헌법률심판의 제청 주체는 법원이다.
- ㉢. (×)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에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 항소심 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만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
- ㉣. (×) 정당해산심판의 제소 주체는 정부이다. 국회는 탄핵소추의 주체이다.

문6. <보기 1>의 ‘○○구’와 같은 조직의 특성에 대한 옳은 추론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1>

○○구는 5급 과장이 팀장이 되고 일부 6급 계장도 팀장에 합류하는 조직을 만들었다. ○○구청의 조직은 과거 3국 17실 78담당에서 3본부 24팀 16부분으로 개편되었으며 여섯 명의 6급 공무원이 5급 공무원과 같은 팀장으로 발탁되어 업무를 추진 중이다. 또한 결재 권한을 갖고 있던 계장 직급이 폐지되어 72명의 6급 계장이 팀원으로 실무를 맡게 되었다.

<보기2>

- ㉠. 분권화된 조직 운영 체계를 갖고 있을 것이다.
- ㉡. 위계는 더욱 수평적으로 변화하였다고 할 것이다.
- ㉢. 고정된 업무 중심에서 상황에 따라 주어지는 과업 중심으로 변화하였다.
- ㉣. 다양한 외부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 ① ㉠,㉢
- ② ㉡,㉢
- ③ ㉠,㉡,㉢
- ④ ㉡,㉢,㉣

[문6 해설] 정답③ 사회문화 「관료제와 탈관료제」 난이도 하

○○구는 관료제에서 탈관료제로 조직 구성을 변환시켰다.

- ㉠. (○) 관료제가 소수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조직 형태라면 탈관료제는 분권화를 추구한다.
- ㉡. (○) 관료제는 수직적 위계 서열 구조이지만, 탈관료제는 수평적 구조이다.
- ㉢. (○) 탈관료제는 정해진 규칙과 절차에 따르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조직 운영 원리이다.
- ㉣. (×) 관료제는 다양한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반면에 탈관료제는 외부 환경 변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문7.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가), (나) 관점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가)	업무의 중요성과 역할 수행의 정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차등 보상은 사회 발전에 도움을 준다.
(나)	업무의 중요성은 현 기득권층의 판단이고 불평등은 가정 배경이나 권력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며, 사회 불평등 현상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다.

- ① (가)는 사회 불평등을 능력의 차이에 따른 서열화로 본다.
- ② (가)는 사회 불평등이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 ③ (나)는 (가)와 달리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다고 본다.
- ④ (나)는 (가)와 달리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본다.

[문7 해설] 정답① 사회문화 「사회 불평등 현상을 바라보는 기능론과 갈등론」 난이도 하

(가)는 기능론, (나)는 갈등론이다.

- ① (○) 기능론은 능력에 따른 차등 분배가 사회 불평등 현상을 초래한다고 보며, 이는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
- ② (×) 사회 불평등이 생산 수단의 소유 여부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③ (×) 직업 간 사회적 중요도가 다르다고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다.
- ④ (×) 사회 불평등 현상을 필수 불가결한 것으로 보는 관점은 기능론이고, 갈등론은 사회 불평등 현상은 극복하고 타도되어야 한다고 본다.

문8. <보기 1>은 전통 사회에서 고도 산업 사회까지의 인구 변천 단계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1>

단계	인구 모형
(가)	감산소사형
초기산업사회	다산감사형
전통사회	다산다사형
(나)	소산소사형

<보기2>

- ㄱ. (가)는 후기 산업 사회에 해당한다.
- ㄴ. 우리나라 1960년대는 (나)에 해당한다.
- ㄷ. 노인층의 비율은 소산소사형 단계에서 제일 높다.

- ① ㄱ,ㄴ                      ② ㄱ,ㄷ                      ③ ㄴ,ㄷ                      ④ ㄱ,ㄴ,ㄷ

[문8 해설] 정답② 사회문화 「인구 변천」 난이도 중

(가)는 인구 변천 3단계이고, 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 발전 시기에서 나타난다. (나)는 인구 변천의 마지막 단계인 4단계이고, 노인문제가 발생하는 선진 산업사회에서 나타난다.

- ㄱ. (○) 초기 산업사회를 산업혁명 직후 사회로 본다면, 후기 산업사회는 7,80년 대를 의미한다. 이 시대에는 감산소사형이기 때문에 (가)에 해당한다.
- ㄴ. (×) 우리나라 1960년대는 초기 산업사회이기 때문에 다산감사형이다.
- ㄷ. (○) 노인층의 비율이 높은 단계는 마지막 4단계인 소산소사형이다.

문9. <보기 1>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한다.)

<보기1>

(단위 : %)		
질문	갑국	을국
하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50	㉠
중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70	40
상층을 제외한 인구의 비율은?	80	80

<보기2>

ㄱ. ㉠에 해당하는 값은 80이다.
ㄴ. 갑(甲)국에서는 하층 인구수가 가장 많다.
ㄷ. 을(乙)국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다.
ㄹ. 갑(甲)국과 을(乙)국의 상층 인구수는 같다.

-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문9 해설] 정답④ 사회문화 「계층 구조」 난이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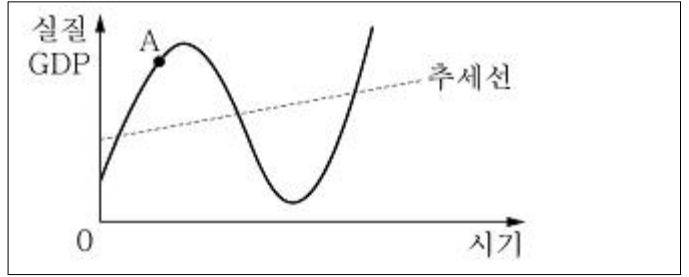
갑국에서 하층을 제외한 비율이 50%이면, 하층은 50%이고, 중층을 제외한 비율이 70%이면 중층은 30%이고, 상층을 제외한 비율이 80%이면 상층은 20%이다.

	갑국	을국
상층	20%	20%
중층	30%	60%
하층	50%	20%

- ㄱ. (○) 을국의 하층은 20%이기 때문에 하층을 제외한 비율은 80%이다.  
 ㄴ. (○) 갑국의 하층의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하층 인구 수가 가장 많다.  
 ㄷ. (○) 을국은 중층의 비율이 제일 높기 때문에 다이아몬드형 계층 구조이다.  
 ㄹ. (×) 갑국과 을국의 상층 비율은 같지만, 전체 인구 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상층 인구 수가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문10. <보기>의 그래프는 경기변동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A시기에 요구되는 경제 안정화 정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① 세율 인하      ② 정부지출 증가  
 ③ 재할인율 인상      ④ 국공채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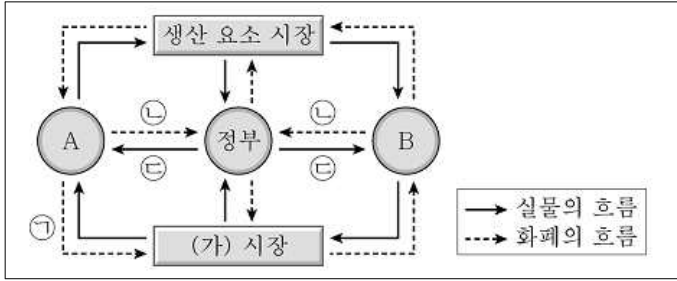
[문10 해설] 정답③ 경제 「긴축정책」 난이도 하

A시기는 경기가 과열되어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국면이다. 따라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긴축정책이 필요하다.

- ① (×) 세율 인하는 경기 침체시에 시행하는 확장정책이다.  
 ② (×) 정부지출 증가는 경기 침체시에 경기를 부양하려는 확장정책이다.  
 ③ (○) 재할인율 인상은 통화량을 감소시키고 금리를 인상하려는 긴축정책이다.  
 ④ (×) 국공채 매입은 통화량을 증가시켜 경기를 부양하려는 확장정책이다.

문11. <보기>는 국민 경제 주체의 상호 관계를 나타낸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 ① ㉠의 예로는 임금, 이자, 지대 등이 있다.
- ② 경기가 불황일수록 ㉡의 크기가 커진다.
- ③ B는 (가) 시장의 공급자로 효용 극대화를 추구한다.
- ④ 정부의 흑자 재정 정책은 A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문11 해설] 정답④ 경제 「국민 경제 순환 모형」 난이도 하

A는 사회 서비스, B는 사회보험, C는 공공부조이다.

- ① (×) (가) 시장은 생산물 시장이고, A는 생산물을 수요하는 가계이다. 따라서 ㉡은 소비지출이다. 임금, 이자, 지대는 분배로써 가계가 생산요소를 제공한 대가로 받는 분배이다.
- ② (×) ㉢은 조세이다. 경기가 불황일 경우 가계나 기업 모두 소득이 감소하기 때문에 조세의 크기도 작아진다.
- ③ (×) B는 생산요소를 수요하고, 생산물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 효용 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체는 가계이다.
- ④ (○) 정부의 흑자 재정 정책은 조세를 많이 거두고 정부 지출을 줄이는 경우이다. 이는 가계의 소득을 감소시키는 요인이다.

문12. 일탈 이론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가) 특정 행위에 대해 어느 집단이나 개인이 그것을 일탈 행동이라고 주장하고, 그것이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받아들여질 때 결국 일탈 행동이 된다.
- (나) 준법적 태도를 보이던 사람도 일탈자들과 오랫동안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법과 규범을 경시하는 태도를 습득할 경우 일탈에 가담할 가능성이 높다.
- (다) 산업화 단계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은 규범과 역할의 혼란을 겪게 되고 그에 따른 불만이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다.

- ① (가)는 (다)와 달리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 ② (가)는 (나), (다)와 달리 일탈이 행동의 속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사회적 반응에 의해 규정된다고 본다.
- ③ (나)는 (가), (다)와 달리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본다.
- ④ (다)는 (가), (나)와 달리 미시적 관점에서 일탈 행동을 설명한다.

[문12 해설] 정답② 사회문화 「일탈이론」 난이도 하

(가)는 낙인이론, (나)는 차별적 교제이론, (다)는 아노미론이다.

- ① (×) 사회의 지배적 가치와 규범을 사회화하지 못해서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은 아노미론이다.
- ② (○) 낙인이론은 일탈을 규정하는 객관적 기준은 없고, 어느 행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반응이 있을 때 비로소 일탈이 된다고 본다.
- ③ (×) 지배 집단의 기득권 보호를 위한 사회 제도 때문에 일탈 행동이 발생한다고 보는 관점은 갈등론이다.
- ④ (×) (가)와 (나)는 미시적 관점이고, (다) 아노미론은 기능론으로 거시적 관점이다.

문13. <보기>는 우리나라 △△도 □□군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 결과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보기>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도 의회 의원 선거 제1선거구	A당 정○○ 7.9%	B당 신○○ 39.5%	C당 이○○ 12.3%	D당 김○○ [당선] 40.3%	
선거구	후보자별 득표율				
□□군 의회 의원 선거 가선거구	A당 최○○ [당선] 45.4%	A당 박○○ 15.0%	B당 안○○ [당선] 20.2%	B당 표○○ 12.1%	C당 조○○ 7.3%

- ① 광역의회 의원 선거는 단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였다.
- ② 가선거구에서는 각 정당의 총 득표율에 따라서 당선자가 결정되었다.
- ③ 제1선거구에 적용된 선거구제는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는 문제점이 있다.
- ④ 가선거구에 적용된 대표 결정 방식은 당선자 간 득표율의 차이로 동일 선거구 내에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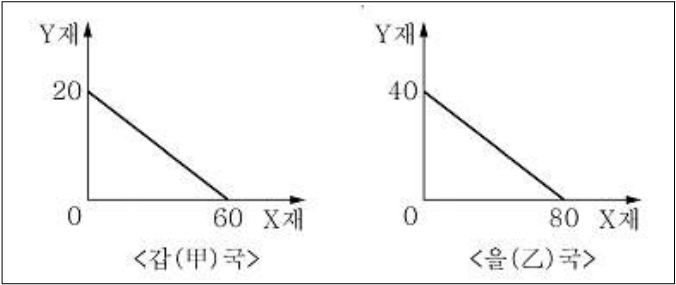
[문13 해설] 정답② 법과정치 「선거 표 해석」 난이도 중

그림에서 위의 표(제1선거구)는 광역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로 1명만 당선자가 되었기 때문에 소선거구-다수대표제이고, 아래 표(가선거구)는 기초 지방의회 지역구 의원 선거로 2명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중선거구-소수대표제이다.

- ① (○) 1명을 당선인으로 하면서, 40.3%의 득표율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단순 다수대표제를 채택하였다.
- ② (×) 가선거구는 중선거구로 2명을 당선인으로 하고 있다. 이 경우 각 정당은 당선인 수만큼 공천할 수 있다. 당선인은 각 정당의 총득표율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각 정당의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라 1등과 2등을 당선인으로 한 것이다.
- ③ (○) 제1선거구는 소선거구제이다.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정당별 득표율과 의석률의 불일치가 심하다.
- ④ (○) 소수대표제는 여러 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당선인 간의 표의 가치가 달라서, 투표 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 1등이 100표, 2등이 50표로 당선되었다면 2등이 받은 투표의 가치가 1등보다 2배가 되어 투표가치의 차등 문제가 발생한다.

문 14.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생산가능 곡선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양국의 생산요소 투입량은 동일하며, 교역 시 양국은 비교 우위에 있는 재화에 특화한다.)

<보기>



- ① 갑(甲)국은 X재 50개와 Y재 15개 생산이 가능하다.
- ② X재 교환비율은 Y재 1/3에서 Y재 1/2 사이에서 결정된다.
- ③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을(乙)국이 갑(甲)국보다 크다.
- ④ 무역 발생 시 갑(甲)국은 X재를 수입하고, Y재를 수출한다.

[문14 해설] 정답② 경제 「비교우위」 난이도 중

- ① (×) 갑국은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이 X재 3개이다. 따라서 Y재를 15개 생산하면 X재는 15개 밖에 생산할 수 없다.
- ② (○) 갑국의 경우,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3개이기 때문에 X재 1개를 을국에 주고 교환해오는 Y재는 1/3개 보다 많아야 한다. 을국의 경우, X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Y재 1/2개이기 때문에 X재 1개를 갑국으로부터 받아오면서 Y재를 1/2개보다는 적게 주어야 한다. 따라서 X재 1개의 교환비율을 Y재 1/3개와 1/2개 사이에서 결정된다.
- ③ (×) Y재 1개 생산의 기회비용은 갑국의 경우는 X재 3개이고, 을국의 경우는 X재 2개이다. 갑국이 을국보다 크다.
- ④ (×) X재는 갑국이 비교우위가 있고, Y재는 을국이 비교우위가 있다. 수출은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이다. 따라서 갑국은 X재를 수출하고, Y재를 수입한다.



15. <보기>는 갑(甲)국과 을(乙)국의 연도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나타낸 것이다.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기준연도는 2014년이며, 물가수준은 GDP디플레이터로 측정한다.)

<보기>

	갑(甲)국			을(乙)국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경제성장률	-5	10	15	3	-2	4
물가상승률	-10	10	20	2.5	-4	6

※ GDP디플레이터 = (명목GDP/실질GDP) × 100

- ① 2014년에 비해 2015년 갑(甲)국의 실질GDP는 증가하였다.  
 ② 2015년 을(乙)국은 전년대비 명목GDP 증가율이 실질GDP 증가율보다 낮다.  
 ③ 2016년에 갑(甲)국은 전년대비 총수요가 증가하였을 것이다.  
 ④ 2017년에 갑(甲)과 을(乙)국 모두 총수요가 감소하였을 것이다.

[문15 해설] 정답③ 경제 「명목GDP와 실질GDP」 난이도 중

- ① (×) 경제성장률은 실질GDP증가율이다. 갑국의 2015년은 전년 대비 실질GDP증가율이 -5%이기 때문에 실질GDP가 감소하였다. 증가율이 음(-)의 값이면 전년 대비 크기가 줄어들었다는 의미이다.  
 ② (×)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값이 명목GDP증가율이다. 을국의 경우 2015년 실질GDP증가율은 3%이지만, 명목GDP증가율은 5.5%이기 때문에 명목GDP증가율이 더 높다.  
 ③ (○) 2016년 갑국은 전년 대비 실질GDP도 커졌고, 물가지수도 커졌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하여야 한다.  
 ④ (×) 2017년에는 갑국과 을국 모두 실질GDP도 증가하였고, 물가도 상승하였기 때문에 총수요가 증가하였다.

16. <보기>는 근로 계약서의 일부이다. 이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근로 계약서
사용자 'A'와 근로자 'B'(만 17세)는 다음과 같이 근로 계약을 체결한다.
1. 근로 계약 기간: 2018년 3월 1일~12월 31일 ...(중략)...
4. 근로 시간: 9시부터 20시까지(휴게시간 1시간 포함)
5. 근무일: 매주 월요일~토요일
6. 임금: 7,000원(시급)
※ 단, 2018년 최저 임금은 시간당 7,530원임

- ① B는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없다.  
 ② 근로 기간이 1년 미만이기 때문에 A는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③ B가 임금에 대해 A와 합의했다면 최저 임금을 요구할 수 없다.  
 ④ A는 근로 시간과 관련하여 근로 기준법을 위반하였다.

[문16 해설] 정답④ 법과정치 「근로 기준」 난이도 중

- ①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 『근로기준법 제16조(계약기간)』 근로계약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것과 일정한 사업의 완료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것 외에는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근로 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단,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은 강행법이기 때문에 당사자 약정 내용보다 우선 적용된다. 최저임금을 요구할 수 있다.  
 ④ (○) B는 연소근로자이기 때문에 1일 7시간, 연장근로는 1일 1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계약서에는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으로 정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문17. <보기>의 (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보기>

2017년 12월 국제 연합 (가) 이/가 미국의 예루살렘 이스라엘 수도 선언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미국 반대로 부결되었다. (가) 15개 이사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표결했지만 14 대 1로 부결되었다.

- ① 국제 연합의 최고 의결 기관이다.
- ② 국제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진다.
- ③ 국제 분쟁에 개입할 때 군사력을 사용할 수 없다.
- ④ 국제법을 적용하여 국제 분쟁을 해결하는 국제 연합의 사법 기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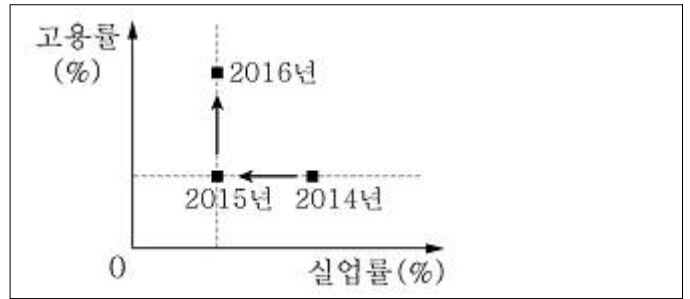
[문17 해설] 정답② 법과정치 「안전보장이사회」 난이도 하

(가)는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이다.

- ① (×) 유엔의 최고 의결 기관은 총회이다.
- ② (○)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 ③ (×)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로 유엔 평화 유지군을 사용할 수 있다.
- ④ (×) 유엔의 사법기관은 국제사법재판소이다.

문18. <보기>는 갑(甲)국의 고용지표 변화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단, 갑(甲)국의 15세 이상 인구는 변하지 않았다.)

<보기>



- ① 2015년 취업자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 ② 2015년 비경제활동인구 수가 2014년보다 더 적다.
- ③ 2016년 실업자 수가 2015년보다 더 많다.
- ④ 2016년 경제활동인구 수는 2015년과 동일하다.

[문18 해설] 정답③ 경제 「고용 관련 지표」 난이도 중

- \* 15세 이상 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 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수 + 실업자 수
- \* 고용률 =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 \* 실업률 = [실업자 수 / 경제활동인구] × 100

- ① (×) 고용률은 [취업자 수 / 15세 이상 인구] × 100 이다. 2014년과 2015년의 15세 이상 인구는 같고, 고용률도 동일하기 때문에 취업자 수도 같다.
- ② (×) 2014년도에 비해 2015년도 실업자 수는 감소하였다. 따라서 2015년도의 경제활동인구(취업자 수 + 실업자 수)는 2014년보다 작아졌고, 반대로 비경제활동인구는 많아졌다.
- ③ (○)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실업률은 같지만 고용률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2016년은 전년에 비해 취업자 수가 많아졌고, 실업자 수도 증가하였다.
- ④ (×)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한 수이다. 2016년은 2015년에 비해 취업자 수도 증가하였고, 실업자 수도 증가하였기 때문에 경제활동인구는 많아졌다.

19. <보기 1>에 소개된 갑(甲)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 2>에서 모두 고른 것은?

<보기1>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갑(甲)은 자신이 개발한 수소자동차로 인해 많은 칭송을 받고 있지만 출세보다 사랑에 모든 것을 건다. 중소기업의 부장이신 아버지 을(乙)의 뜻을 거역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병(丙)과 결혼을 강행하며 항상 자신보다 병(丙)을 감싸고 위한다.

<보기2>

- ㄱ. 갑(甲)은 역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 ㄴ. 갑(甲)은 2차적 사회화 기관의 구성원이다.
- ㄷ. 갑(甲)은 후천적으로 획득한 지위를 갖고 있다.
- ㄹ. 갑(甲)은 성취지위와 귀속지위에서 역할 갈등을 경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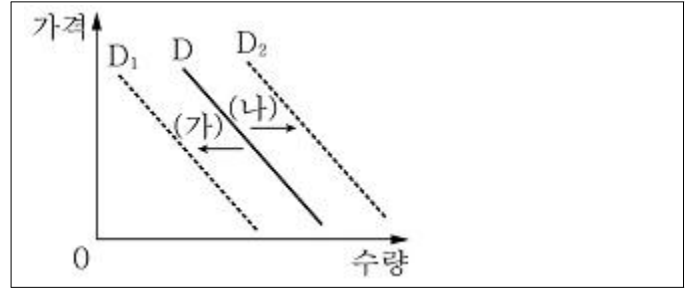
- ① ㄱ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ㄴ, ㄷ, ㄹ

[문19 해설] 정답③ 사회문화 「지위와 역할」 난이도 하

- ㄱ. (×) 칭송을 받는 것은 보상이지만, 역할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이다.
- ㄴ. (○) 회사는 2차적 사회화 기관이다.
- ㄷ. (○) 갑은 회사원, 남편 등의 성취 지위를 가지고 있다.
- ㄹ. (×) 역할 갈등 상황은 나타나 있지 않다.

20. <보기>에서 (가)와 (나)는 X재 수요의 변동이다. (가)와 (나)의 변화 요인을 가장 옳게 연결한 것은?

<보기>



(가)

- ① 소득 감소
- ② 기호 감소
- ③ 인구 감소
- ④ 가격 하락

(나)

- 대체재 가격 상승
- 대체재 가격 하락
- 보완재 가격 상승
- 보완재 가격 하락

[문20 해설] 정답① 경제 「대체재와 보완재」 난이도 하

(가)는 수요의 감소, (나)는 수요의 증가이다.

- ① (×) X재가 정상재이면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감소하여 (가)이다. 반대로 X재가 열등재라면 소득 감소는 X재의 수요를 증가시켜 (나)가 된다. 문제에서 X재가 정상재인지 열등재인지 언급이 없기 때문에 틀린 지문이다. 또한 X재의 대체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수요가 증가하여 (나)이다.
- ② (×) 기호가 감소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하여 (가)이다. X재의 대체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하여 (가)이다.
- ③ (×) 인구가 감소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하여 (가)이다. X재의 보완재의 가격이 상승하면 X재의 수요가 감소하여 (가)이다.
- ④ (×)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곡선이 움직이지 않고, 수요 곡선 상의 점의 이동으로 나타난다. (가)와 (나) 모두 아니다. X재의 보완재의 가격이 하락하면 X재의 수요가 증가하여 (나)이다.

정답지는 ①로 했지만, 정답은 없다. 그러나 정답을 반드시 골라야 한다면, X재를 정상재로 보고 ①으로 했었을 것이다.